



KNSI 특별기획 제23-1호

MB노믹스 거시 및 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I. 머리말
- II. 거시변수를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게임
- III. 정책혼선의 근본원인: 성장정책의 문제점
- IV. 이념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
- V. 맺음말

I. 머리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변수들도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환율과 금리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 거시경제의 불안상황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추어 대외적 충격에 대한 국내 시장의 반응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동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는 세계에서 6개밖에 되지 않는다. 즉, 우리 경제의 위상은 국제적 자본이동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소규모 개방경제” 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과도한 불확실성은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적인 예가 “9월 위기설”이다. 2,400억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6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이 두려워 요동을 치는 현상은 대외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대내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리더십 실종 사태를 꼽을 수 있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게임에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못할 경우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불안정성이 증폭된다. 시장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은 정부가 하는 말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정부의 진정한 선호와 배치될 때 발생한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정책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 사이의 게임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보다 근본적 문제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거시변수를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게임

거시경제변수를 둘러싼 시장과 정책당국 사이의 게임은 항상 있어왔지만 현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그 양상은 크게 격화되었다. 환율정책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경제팀 출범 초기 정책당국자들은 환율상승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했고 그 때마다 시장은 환율상승에 과감한 베팅을 했다. 물론 그 베팅은 성공적이었고 성공의 확신이 커질수록 베팅의 강도도 세어져 갔다. 경제팀이 환율상승을 선호한다는 점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장이 정부를 잘 따라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경제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이다. 당시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와 국제유가 폭등 속에서 원화가치를 달러보다도 더 약세로 끌고 가는 것은 대외적 충격을 증폭시켜 물가폭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 사태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종되었고 경제팀의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한 번 문제가 생기자 이에 파생한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야기되었다. 즉, 물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는 거꾸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마침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던 시점에 이루어진 시도라서 워낙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 그나마 고환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팀 수장이 재신임되면서 환율안정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 그리고 정부가 정말로 정책기조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소나기만 피하고 가



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의 달러 매각을 통한 환율안정 시도는 외환보유고만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환율안정의 목소리는 이른바 9월 위기설 속에 묻혀버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달러 매각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싼 가격에 달러를 사겠다고 나선 시장참가자들, 그리고 좋은 조건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공급이 늘 때마다 더 많은 달러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정부의 시도를 무력화해 버렸다.

이상의 에피소드에서 문제는, 정부가 환율의 방향성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시장이 이를 이용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이다. 시장참가자들은 항상 이윤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변수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챈 순간 이들은 “투기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손쉽게 돈을 벌 기회를 정부가 제공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환율과 같은 가격변수의 통제는 경제규모가 작았던 시절에는 시장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겠지만 가격통제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책담당자의 진정한 선호와 배치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과감한 투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정부와 시장 사이의 게임에서 시장은 항상 정부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한다. 시장은 정부의 효용함수를 추측한 후 정부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답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경제팀은 환율상승에 대한 원조적 선호,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격변수에 대한 통제욕구 등 자신의 선호체계를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의도와는 정반대로 투기를 부추기고 만 것이다. 고환율을 바라는 경제팀의 등장은 그 자체로서 투기적 공격의 재료가 되었고, 한술 더 떠 고환율을 좋아하는 바로 그 경제팀의 환율안정 시도는 국내외의 “투기꾼”들을 불러들이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적어도 투기꾼들이 볼 때는 정부가 환율상승에 대한 베팅의 성공확률을 높여준 다음 저렴하게 달러를 공급해주는 이상적인 상황이 조성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진정한 선호와 정책방향이 일치하느냐의 문제는 정부의 신뢰성과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선호와 정책방향이 일치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선호와 정부가 표명한 정책방향이 불일치할 때에는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로 움직임으로써 이윤기회를



얻고자 한다. 이는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앉으면 실제 금리 인상을 별로 하지 않아도 물가가 안정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인물이 총재가 되면 똑 같은 정책을 펼 때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아울러 정책의 신뢰성은 그 실현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궁극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한다. 전 세계적인 달러약세 시기에 원화약세를 추구하거나 달러강세 시기에 원화강세를 추구하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무모한 시도이므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 경제팀이 진정한 선호와 정책방향 사이의 마찰, 그리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일으킨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아마도 현 정부의 성장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정책혼선의 근본원인: 성장정책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성장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흐름이나 국내 거시경제 상황은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안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정부를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부의 성장주의가 현실에 기반을 둔 최적의 성장전략이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이념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정말로 “실용주의” 적 성장정책이었다면 경제환경이나 대내외적 조건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며, 최근과 같이 물가가 불안해지고 경제안정이 중요해진 시기에는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과 미래를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중점을 두었을 것이다.

“MB노믹스” 성장정책이 이념에 가깝게 된 것은 그 주요 작동 메커니즘이 현실성을 결여하게 된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라는 명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기업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



으로 시장을 정글로 변화시켜 건전한 투자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즉, 규제완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선은 아니며, 규제완화가 세간의 우려대로 대기업 편향적이 될 경우 오히려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감세도,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 기업들에게 과연 투자를 늘리게 하는 유인이 될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꼭 필요한 정부지출을 제약함으로써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와 성장을 제고”도 상식과는 달리 증명되지 않은 명제이다. 경제구조가 IT산업 등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자동화 투자가 늘면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 확대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투자율을 높인다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지도 실증적으로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투자의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만다.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투자를 늘리자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흑자는 해외부문의 수요 증대와 동시에 내수의 상대적 위축을 수반하게 되는데,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증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가 크게 늘었던 1990년대 중반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최근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졌었으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또 환율과 금리를 경기부양에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그 반시장적 속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전 세계적인 물가불안 앞에서는 더더욱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MB노믹스 성장정책의 주요 연결고리는, 적어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의 한국경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노믹스의 성장정책은 이념이 되어버렸고 엄혹한 현실 앞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 성장주의를 계속 추구해도 별 성과가 없고 그렇다고 그토록 신봉해온 “성장”을 버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IV. 이념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

필자는 경제성장론 전공자로서 경제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이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념적 성장주의는 성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스스로의 손과 발을 묶어 정책의 신축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성장 조급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싶게끔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성장주의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도국의 성장전략으로 어떠한 대안들이 모색되어 왔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형성된 와싱턴 컨센서스를 상기해 보자. 와싱턴 컨센서스는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제안으로서 시장 근본주의에 가깝다. 규제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등이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정부의 경제개입은 회피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중남미 국가 등에 적용되었으나 현실에서 잘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정된 와싱턴 컨센서스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최초의 와싱턴 컨센서스에서 가정했던 “트리클다운 효과”(적하효과), 즉 부자나 기업 등 경제적 강자가 잘 되면 소비도 늘고 일자리도 생겨나 경제 적 약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온다는 가설이 잘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반응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강화, 부패 척결, 건전한 자본개방 등 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개도국들의 성장을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의 지원 하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를 중심으로 성장론의 대가 로버트 솔로우를 포함한 프로젝트팀이 꾸려져 새로운 와싱턴 컨센서스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2008년 5월에 나온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 모든 나라들에 공통된 단일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발전단계별로 각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성장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중간소득국가에서는 혁신과 고등교육이 중요하다고 한다.

스펜스의 새로운 컨센서스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최근 경제성장론의 연구성과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요소투입과 물적자본 중심의 (물적) 투자주도형 성장전략이 유효한 반면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이후에는 기술혁신과 인적 자본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물적 투자보다는 혁신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질 투자는 훌륭한 인재와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은 경우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또한 성장과 분배 사이의 전통적 상충관계를 보완관계로 바꾸어 주는 역할도 한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분배의 형평성도 개선하는 좋은 정책수단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말로 실용적인 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걸맞은, 사람과 지식·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역동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꾀하는 것이다.

V. 맺음말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MB노믹스의 성장정책을 이념에서 해방시켜 우리 현실에 맞는 성장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허한 트리클다운 효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람과 지식·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문에 대한 공적 투자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또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방향으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좋은 아이디어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업가정신”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격변수에 영향을 주어 단기적 성과를 피하고자 한다는 시장의 인식을 철저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올바른 성장전략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비롯된 신뢰와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2008/09/25)

